

“하나로마트서 상생카드 사용 못한다고...”

연매출 30억 이상 지역화폐 제한
광주, 마트 8곳·직매장 2개 해당
전남 32.9% 제한... 3곳 중 1곳
지역민 “현실 고려하지 않은 처사”
조합원 불편·매출 등 타격 불가피

“집 앞에 마트가 여기(하나로마트) 하나뿐인데 이제 이거(광주상생카드) 어디서 쓰라고. 누굴 위한 정책이랍니까?”

정부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다.

광주의 경우 하나로마트 10곳, 전남은 112곳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서 정부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하나로마트 광주농협매곡지점에서 만난 김예희(65)씨는 정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김씨는 “우리 농민들은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한다”며 “매출액이 많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제한하는게 맞나 싶다”고 호소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연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광주의 경우 30개의 하나

로마트 중 2개의 로컬푸드매장과 8개 하나로마트가 제한대상이다.

전남은 112개소로 전남의 전체 하나로마트 32.9%가 해당된다.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3곳 중 1곳의 매장에서는 오는 5월부터 최대 10%까지 할인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농촌지역에선 하나로마트·농자재센터 등 지역농·축협 경제사업장이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다. 하나로마트 이외에는 접근성이 좋으면서 제대로 된 생필품·농자재 판매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전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많아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순천농협 하나로마트를 자주 방문한다는 김미진(65)씨는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을 지역화폐로 구입해 고물가 시대에 그나마 부담을 덜고 있었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졌다”며 “집과 가까운 대형마트도 이 곳 뿐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제한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농협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송정근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동림지점장은 “농협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유통단계

를 줄여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고, 정부지침에 맞춰 마트를 운영하다보니 불가안정의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트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하고

객층이다.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개정안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의견을 냈지만, 이미 보고를 마친 사항이라서 시행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올해 광주시 상생지원카드 예산 855억원 중 165억원이 정부지원금이다. 개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담배꽂이 가득한 '광주 관문' 광주의 관문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와 시내버스 승강장 인근 인도에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꽂이로 가득하다. 쓰레기나 담배꽂이 무단투기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가 부착됐지만 무용지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김양배 기자

日 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 특허권 가집행한다

미쓰비시중공업 6억8700만원
제3자 배상안 거부... 집행권리 행사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기업이 대신 떠안는 ‘제3자 배상안’을 추진하려 하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가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이어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정부와 피해자 간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특허청이 위촉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뜻한다. 판결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승소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이다.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700만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지난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

은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3~4개월에 이르렀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배상안으로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대리인은 제3자 배상을 대신 진행하기로 알려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피해생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이어 지난 14일 원고故 박해옥 할머니

의 유족의 동의를 받아 “유족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혜인 기자

HAVE MORE FUN!

Life Food, Domino's.

도미노피자에서 가맹점 대표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영광 / 완도 / 영암삼호 / 장흥 / 강진 / 진도

☎ 02-6954-3059 | ✉ khgoo@dominos.co.kr

☎ 02-6954-3020 | ✉ syyoo@dominos.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왕복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왕복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